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전망

박재완 원광대학교
최기웅 조선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져올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갈 정책발전과 대안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표출된 미·중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는 탈(脫)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체제우월성 경쟁, 국가주의로 국제적 거리두기의 탈(脫)세계화와 각자도생,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험,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는 양상을 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신안보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신안보 위협의 대응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기회의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세밀하게 전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의 전략경쟁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신안보 분야 의제창출자로서 국제적 차원의 관심도와 협력을 주창하고, 신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질서, 신안보, 탈세계화

I. 서론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년 3월 11일, 신종 코로나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를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인 글로벌 팬데믹(global pandemic)으로 공식 선언하였다(동아일보 20/3/12).¹⁾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Reverun et al 2011, 159-183).²⁾ 코로나19는 중국의 우한(武漢)에서 최초로 감염자가 발생해 전 세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주로 감기증상과 폐렴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명칭은 ‘COVID-19’(코비드-19)이며, 한국은 ‘코로나19’로 명명하였다(박재완 2020, 25).³⁾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세계화를 통해 국가 간 이동이 양과 속도가 모두 증대된 것이 역설적으로 빠른 감염병 확산을 촉발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세계화 관점, 그리고 ‘신안보(新安保, emerging security)’ 개념을 고려할 때, 팬데믹은 국가 간 협력의 촉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감염병이 어떤 특정 국가의 의도적인 도발이나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모든 국가가 해당되는 ‘공통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국제관계의 현상은 이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염

1) 세계보건기구(WHO)는 1946년 61개국이 세계보건기구헌장에 서명하여 1948년 26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친 다음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창설 이후 세 번째로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팬데믹은 WHO 전염병 6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이며, 2개 대륙 이상 추가 전염이 발생한 상태에서 발령한다.

2) 레브룬과 마호니-노리스(Reverun and Norris)는 『국경 없는 세계의 인간안보』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특징은 질병은 개발을 늦추며, 전쟁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낳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팬데믹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기예방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3) COVID-19에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의 앞 글자를 따고, 발생 연도인 2019년을 뜻하는 19를 넣었다. 한국 정부는 코비드-19와는 별도로 한글 표현으로 ‘코로나19’로 정하였다.

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상호 이동의 통제, 정확한 정보 공유에 대한 소극성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차두현 2020, 1).

이제는 코로나19 자체의 위험성 못지않게 이 신종 감염병이 불러올 새로운 세계와 국제질서에 주목해야 하며, 한국도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책발전과 정책대안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과 국제정세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세계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향후 전략 변화에 대한 전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위협인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정세에 대해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에 대한 예측과 판단을 통해 향후 한국이 나아갈 정책발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탈피하여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따른 ‘新安보’ 이론을 고찰하고,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국가전략과 코로나 19 대응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국제관계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전망, 특히 코로나19가 증폭시킨 ‘新安보’의 공동대응 혼란과 위협, 다양한 복합적 위기를 통해 더욱 심화되는 미·중의 전략 경쟁과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현상 진단과 향후 전망을 통해 한국의 ‘新安보’ 대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질서의 개념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는 국제적인 주체, 즉 국가 간의 일정한 규범이나 규칙의 형태가 존재하고 그것에 따른 주체의 행동이 전체로서 주요한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활동양식이다. 국제질

서에는 주체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뿐만 아니라 공통의 규범이나 가치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황진환 2015, 10).

국가 간에 기본적인 가치의 대립이 없고, 영토문제 등 구체적인 여러 문제에 관하여 분쟁의 처리방식 등에 관하여 명시되거나 암묵적인 이해가 존재하고 현상에 관하여 각국의 합의가 있고 또한 현상에 각국에서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글로벌 또는 지역에서의 국제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질서는 정치 외에 경제, 문화,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의 공통의 가치나 규범이 존재하고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칙의 구축, 유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국제질서는 통상 국가 간에 형성되는 것이지만 지구 환경문제 등 국가를 초월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의 기본적인 목적인 글로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 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를 포함한 규범이나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형성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글로벌한 문제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비국가행위자간에도 자신들 간의 일정한 규칙, 규범을 공유하여 탈국가적인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즉, 국가 단위의 사회질서로서의 국제질서가 아니라 국가를 포함하면서도 국내까지 적용되는 또는 비국가행위자, 개인에 이르기까지 국제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

2. 안보개념의 변화

1)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 개념

‘안보(安保, security)’는 근심 또는 걱정이 없는 자유, 안전, 그리고 위협의 부재 상태를 의미한다. 월프스(Anold Wolfers)는 안보에 대해 “객관적으로는 획득된 이익이나 가치(價値, interests)에 대한 위협(威脅, threat)의 부재(不在)를 의미하고, 주관적으로는 그런 가치가 공격당하

거나 위협받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기도 했다(2004, 28).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는 국가를 주체로 하고 군사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개념으로 국가주권과 영토를 보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데, 전통적 안보는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을 보호·증진한다는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전통적 안보는 절대안보 개념에 기반하여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나 적대국 간의 억제(deterrence)에 주안을 두며 군사적 위협의 부재 또는 외부로부터 전복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로 정의할 수 있다(황진환 2015, 6). 전통적 안보 개념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가안전보장의 협의의 해석과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인간 및 환경 위협에 대한 안보를 포괄하는 광의의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해석은 환경파괴, 전염병, 마약, 국제범죄 등 초국가적 위협은 국가안보 개념이 군사안보에 더하여 인간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자원안보, 경제안보 등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공동안보, 협력안보,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로 개념이 확대되면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Barry Busan 1991, 4-8).⁴⁾

2)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新안보 개념의 변화

‘新안보(emerging security)’의 ‘신(新)’은 ‘최근에 생겨난, 최근에 만들어진(emerging)’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새롭게 인식한, 또는 최근에 만들어진 안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新안보는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1990년대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인간안보(human security) 측면에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으로 기존의 전통적 안보 영

4) 베리 부잔(Barry Buzan)은 1991년 발간한 저서를 통해 기존 전통적 군사안보에 추가하여 국가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치안보, 금융 및 시장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경제안보, 국민적 정체성과 언어, 문화 등의 요인을 중시하는 사회적 안보, 기후변화와 질병, 지진 같은 요인들을 중시하는 환경안보 등을 비전통적 안보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을 확장한 개념이다. 즉 기후변화, 테러, 질병 등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로 불리던 사안들을 확대·포괄하여 대응하려는 인식이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일성 2019, 72).

新안보는 안보의 주체(主體)와 수단(手段) 측면에서 전통적 안보와 대비된다. 안보의 주체 면에서는 전통적 안보의 경우 국가를 주체로 하는 데 비해 新안보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 등 다양한 안보의 주체들이 포함된다. 안보의 수단 면에서는 전통적 안보가 한 국가의 군사력을 안보의 주된 수단으로 하는 데 비해 新안보는 개별적인 무기나 테러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나 인공지능의 과학기술과 기후변화의 자연,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등 다양하다.

‘新안보’의 특징은 공통의 위협인식, 협력, 그리고 상호신뢰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新안보는 전통안보에 비해 ‘대결’보다는 ‘협력과 네트워크’적 의미를 내포한다. 전통적 안보는 국가 간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로섬(zero-sum)의 법칙에 따라 국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의 전략적 고려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반면 비전통적 안보인 新안보는 국제정세의 이념경쟁 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아국을 보호하는 대결적 관점보다는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위협들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적 관점과 네트워크를 중요시 한다고 평가해왔다(정현영 2007, 115). 이러한 新안보 개념에 의해 다국적 기업, 국제 비정부 기구, 국제기구,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사회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의 역할에도 기대했다. 하지만 비전통적 위협인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新안보’ 개념 등장 당시의 기대가 상당부분 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포괄적 안보’ 혹은 ‘非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은 곳곳에서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국가들이 ‘新안보’상의 이슈들을 ‘공통의 이해관계’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 간의 전략적 경쟁과 이로 인한 상호 견제하려는 전략도 ‘新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윤석준 2020, 2-9).

III.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세와 미·중의 전략 경쟁

1.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세

‘코로나 19’가 확산해 가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형태를 보이며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국제주의를 압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화 과정에서 비자면제 등을 통해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해오던 추세가 반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화 과정에서 충실하게 대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립과 모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변국에게 입국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대응, 투명성 있는 정보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입국제한을 당하는 등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간 교류나 연대 대신 봉쇄, 차단 기제가 작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 상호 협력을 명시한 조약이나 제도, 관행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Bojan et al, 2020). 新안보의 핵심 가치는 공통의 위협인식과 협력, 상호신뢰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핵심 가치는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국가 간 거버넌스(governance)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anarchy)’ 국가 간의 정치에 연유할 수도 있다(한스 모겐소 2014, 90-91).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보면 주요 국가들의 책임 있는 행동보다는 일방주의와 상호경쟁이 만연했으며, 심지어 감염병 확산을 놓고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책임 전가성 발언과 조치들이 있었다. 미·중 간에 벌어진 ‘발원지’ 논쟁은 감염병이라는 新안보 위협을 공통의 해결과제가 아닌 특정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 간 불신을 부채질하며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⁵⁾ 신흥패권

5)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우한연구소 발원지설’에

국이 부상하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역전쟁에 이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면서 국제질서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존 J. 미어셰이머 2017, 539-544).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국제적 레짐의 역할 부재로 인해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보건이나 인도적 지원 분야는 비교적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WHO도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국제유가 폭락과 함께 국제 금융시장 등의 혼란은 ‘新安보’ 이론상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합적 위기를 고조할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국민일보 20/2/27). 국제유가 폭락은 산유국의 무분별한 원유 과잉 생산으로 빚은 문제로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는 이슈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코로나 19’ 등 세계적으로 심각성을 지니는 ‘新安보’상의 위협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경우, 위기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 중에서 특히 보건안보(health security)에 대한 위협이 개인, 단체,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초국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인간안보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전통적 안보의 목적은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이고, 비전통적 안보인 인간안보, 新安보의 관점에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로 구분한다(UNDP 1994, 3).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바이러스의 공포와 소독제, 마스크의 부족 등 방호물자의 결핍으로부터 모두 자유롭지 못하게 하여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의 구분도 모호하게 하였다. 나아가 전통적 안보의 위협요인이 악의를 가진 사람에 의해 기인한 반면 인간안보의 위협요인은 자연, 사회적 여건에 의

대해 ‘거대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나 피해자가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나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sovrenign immunity)’ 대상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해 발생하기 때문에 덜 도발적(provocative)으로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통적 안보에 대한 위협보다 인류에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이수훈 2020, 4).

급속한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각 국가들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증폭되었으며 이것은 일종의 ‘포비아(phobia, 공포)’를 만들어냈다. 일부 국가들의 정보 왜곡·통제 등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정보공유와 맞물리면서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우한에서의 최초 감염 정보를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무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국가별 가짜뉴스와 여과되지 않은 미확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유통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중국 등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적 혐오와 연결되기도 하였다(이영섭 2020, 1).

그리고 ‘新安보’ 문제의 해결에 있어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非국가행위자들의 역할은 오히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거의 나타나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이것은 예상보다 큰 규모의 新安보 위협에 대해서는 비국가행위자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국가행위자들은 국가보다 정보와 자원 측면에서 각국 정부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차두현 2020, 7).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각국 보건에 대한 총괄감시(global surveillance)와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표가 무색하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WHO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세계 최강대국과의 불협화음은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태의 장기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이수훈 2020, 6). WHO의 권위와 역할은 국가들을 감시하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여국의 규정 불이행을 관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WHO의 불협화음과 WHO가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국가들은 보건안보 체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WHO의 보건 거버넌스 역할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2. 미·중의 전략경쟁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패권경쟁, 新냉전은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박병광 2020, 1-5). 미·중의 전략경쟁을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가 대전략(National Grand Strategy)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있다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中國夢)’이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하여 미국의 경제·군사적 우위를 유지하여 말 그대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강조하며, 미국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수립을 추구하겠다는 기본입장이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대(對)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내세우며 대(對)중국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구하며 아세안(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전략으로는 미국의 경우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추진하면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을 통한 대미개입 대응을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아·태지역 다자무역에 적극 참여하고 대(對)인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 유대 강화 및 일본관계 개선, 주변국관계 개선 추진을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힘을 통한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굴기(軍事崛起)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을 가장 간명하게 규정하자면 ‘갈등 속의 협력’과 ‘전략적 불신 속의 협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미·중 관계는 기본

적 갈등구조의 바탕 위에 선택적 필요와 국가이익에 따라 협력을 추구하는 ‘갈등 속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중 관계는 상호 전략적 불신 상태에서 현실적 필요에 의한 협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략적 불신 속의 협력’으로 묘사할 수 있다(박병광 2020, 2).

특히 미·중의 무역마찰은 무역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강대국들 사이의 무역·통상이슈를 둘러싼 전략경쟁을 넘어 ‘패권경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패권경쟁은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서 서로를 타도의 대상인 적(enemy)으로 규정하고 패권(hegemony)쟁탈을 위한 전면전쟁의 양태를 보여 왔다.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쟁자(competitor)이자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적(enemy)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White House 2017, 25-28).

IV.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질서의 변화

1. 적당한 국제적 거리두기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성행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나 재난이 역사의 경로와 인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듯이 지난 100년 내 최악의 보건위기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 팬데믹도 향후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동안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교육·무역·관광 등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⁶⁾ 코로나19

6)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통상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는 통상 10~15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국내·외 연구진의 노력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기초탐색연구, 개발후보물질 선정, 비임상연구뿐만

로 인해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 After Corona)로 구분하여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며 국제질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지난 탈냉전기 30여 년 간 세계화, 개방화, 자유무역, 국제협력, 시장경제 등의 가치들이 시대적 ‘노멀(normal, 정상/표준)’이 되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반세계화, 미·중 전략경쟁, 세력경쟁, 민족주의, 일방주의, 보호무역, 국내정치 지향 등이 점차 새로운 정상인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정상/표준)’로 부각되는 변동기에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국제사회의 전환기적 성격은 더욱 극대화되고, 기본적으로 미·중의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반세계화, 세력경쟁, 각자도생, 국내정치 지향 등의 ‘뉴노멀’ 현상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중견국·중소강국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新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과 지역협력도 산발적·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정치 지향성과 국가주의·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명손실과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치 공방 등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고, 국내문제에 우선 집중하는 강한 국내 지향성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정책, 유럽연합(EU)에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Britain Exit), 유럽 내 반난민 추세와 극우정권의 등장, 강한 지도자(strong man) 등장 추세에 더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산물로 비판하는 시각도 득세하여 국내 지향성과 민족주의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영준 2020, 3).⁷⁾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사후조치 과정에서 반외국인정서와 인종

아니라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1~4상까지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유용성, 유효성검사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이다.

7) 최근 국제질서는 브렉시트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나는 주요 국가들의 자국우선주의, 국제레짐의 약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차별, 국경통제, 비자유주의적 통제, 중앙정부의 권력 증대, 경제문제 등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논쟁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가 자신의 생명과 안녕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권능도 강화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당분간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으로 국가주의 성향도 지속될 것이다. 반면 국가의 권능이 강화되면서 개인과 사회의 자율성이 약화될 것이므로 국가와 개인·사회의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외부지원 없이 각자 고군분투했고, 심지어 의료물자 확보를 위한 갈등도 노정되었는데, 그런 경험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제협력보다는 자조(自助, self-help)와 각자도생 방안을 요구하고, 정치지도자들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더욱 심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체제우월성 경쟁으로 격화

국제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국제질서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체제우월성 경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중앙일보 20/03/13).⁸⁾ 코로나19로 인해 미·중 간에 新냉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중국은 우한 지역의 바이러스가 그 지역을 방문했던 미 육군 대표단에 의해 유입되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미국은 주미 중국 대사를 소환하여 항의하였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국

8)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인 마이클 그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정학(geopolitics)적 영향에 대해 국가주의 심화, 이념적 경쟁 심화, 미국과 중국의 대립 가속화, 정권을 잡은 정당의 세력 약화를 예상하기도 했다.

제정치학자들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노출되었던 미·중 간 상호불신과 갈등이 더욱 악화되어 향후 미·중의 전략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봉근 2020, 11).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정보 은폐와 호도로 인해 미국의 대응이 지체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마스크와 방호장비, 인공호흡기 등 핵심 의료장비와 물자의 공급을 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 의료물자 부족으로 사망자가 폭증했다는 점과 중국이 의료물품 공급을 대외적 영향력 행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미·중 전략경쟁은 코로나19의 발원지와 대응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비난하고 폄하하려는 적의를 가진 홍보전(public relations battle, propaganda war)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동안에 서로 상대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전략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보건외교전과 공공외교전의 양상도 띌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인 것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우선주의’ 원칙을 더욱 부각시키고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자유무역주의보다는 보호무역, 공조보다는 자조, 공동안보보다는 일국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자기중심적인 교훈은 다소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초기대응이 부실했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에 비유하며 그 위험성을 평가절하하고 경제적 피해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대했었던 것에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정치리더십의 위기, 주민 불만, 정치적 불안정, 경제 폐쇄와 지역봉쇄로 인한 경제위기,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 ‘중국 환자론’과 ‘중국 책임론’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통한 공공외교를 추진 중이나 많은 부분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싸고 강압적이며 무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소위 ‘중국 모델’이 크게 비판받았지만, 점차 중국이 감염사태를 효과적

으로 수습하면서 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모델’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수 있다(Kurt et al 2020, 1). 특히 의료장비와 물자, 보건역량이 부족한 권위주의국가들은 주로 사회적 억압조치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국 모델’에 더욱 친화성이 있다. 그리고 감염병의 효과적인 통제에는 ‘민주적인 사회’보다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체제 선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험과 국제 거버넌스의 갈구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으로 인한 반세계화 추세와 중견국의 국제협력 모색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존재감이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응과정에서 국경통제 및 의료물품을 두고 동맹국, 우호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부재’가 국제 사회의 ‘뉴노멀(new normal)’로 더욱 고착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다른 안보리이사국과 강대국들의 역할도 실종되고, 리더십과 권위도 실추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과정에서 국가들은 세계 공동체의 무능한 민낯과 부족한 의료물품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지도자들은 생존을 위한 국제협력보다는 각자도생, 국제공조보다는 자조, 공영보다는 자강,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를 더욱 중요한 외교원칙과 덕목으로 추구할 것이다.

국제협력과 다자주의의 상징이었던 유럽연합은 영국의 브렉시트, 반난민대응, 국수주의 득세 등으로 인해 이미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 초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책공조와 공동대응에 실패하여 국가 간 갈등요인이 오히려 증폭되었다. 개별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EU는 정책공조와 공동대응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역내 물자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협약을

무시하여 역내 갈등을 조장했다. 코로나19에 대해 의미 있는 공동대응이 실패함에 따라 추후 지역협력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거버넌스란 세계 공동관심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유엔, 국제기구, 초국적·다국적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협력을 의미한다. WHO는 보건·의료분야의 국제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임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미·중의 전략 경쟁으로 인해 WHO의 기능과 권능이 도전받고 있는 형국이다. WHO는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당시 WHO의 팬데믹 선언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에 지나치게 온정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세계화의 균열과 강대국 정치의 균열이 동시에 국제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공동의 문제로서 코로나19를 해결해야 하는 WHO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⁹⁾

초강대국과 달리 작은 경제규모와 자원부족으로 자립과 자조가 불가능한 대부분의 중견국·개도국·중소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실패를 반추하면서, 다자주의와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EU는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의 실패를 성찰하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자주의와 지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주창(主唱, advocate)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봉근 2020, 13-14).

동북아에서의 국제관계도 당분간 냉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 동병상련의 입장을 교류하며 양자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했지만 한국은 참여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 전통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다시 말해 미·중 전략경쟁에 휘말리면서 중대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 동경올림

9)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예측하면서 탈(脫)세계화(deglobalization), 미·중 경쟁, 글로벌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면서 WHO의 기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픽을 연기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여서 당분간 지역관계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중국 경제 의존 탈피, 일·중 경쟁, 미·일 동맹 강화, 한·일관계 축소 등을 추진했는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이런 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한·일관계의 갈등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4. 新안보 위협의 재인식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新안보’와 관련된 국제협력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는 新안보 위협의 재인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기존에 언급되었던 위협들이 단순한 상상이나 이론적인 공상이 아니라 현실로 도래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며 체감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분야를 초월해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못지않게 新안보 위협의 심각성을 전 세계가 절감했기 때문에 각 국가 차원에서 ‘新안보 위협’에 대한 관리와 대안 발굴에 고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의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또한 비국가행위자들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했던 것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비국가행위자들의 역할 보장과 기능 강화를 위한 개별 국가차원, 혹은 국가 간 협력의 논의 역시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강한 정부의 확장과 강화된 역할은 위기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지만 국내정치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도 있다. 정부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가지는 기대와 책임론에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국제기구나 국제적 NGO 등 비국가행위자들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안에 대한 논의도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 新안보 대응을 위한 한국에의 함의와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변화된 新안보 환경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과 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세계화·정보화가 전혀 다른 파급효과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법에 대해 이제는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게 중견국의 딜레마를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대대적인 입국제한이나 통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 국가 간 협력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외교적 협의도 없이 입국통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중견국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측면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신속한 진단, 의료진 헌신과 국민의 자발적 대응 등은 코로나 이후 新안보 분야 대응을 위한 ‘한국형 방역(K-방역)’의 소프트 파워 공유 등 ‘의제 창출자(agenda setter)’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新안보 개념의 변화에 따라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협이 도래할 수 있다.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테러, 식량부족, 불법이민 등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 이슈별 목록과 대응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대응기준뿐만 아니라 新안보 관련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보건·의료와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적인 충격을 가져다주는 복합적 新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분명 초지구적인 재앙임에는 틀림없으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전략과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한국에게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가령 코로나19의 국내적 위기 극

복과 사례는 많은 국가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신속진단키트와 방역시스템, 의료지원 등을 널리 알려 국가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新安보’ 분야 이슈별 징후목록과 대응기준을 정립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전통적 안보 개념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 개념에도 적극 대응해 정치·외교·군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코로나19를 통해 부각된 新安보 이슈들에 대한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적극적 관심 유도과 협력을 주창(主唱)하는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 대응에서 국제협력과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각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예방·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UN과 WHO의 역할이 미흡했고,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주요국들조차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新安보 분야 의제창출자로서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V. 결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전통적 안보 개념도 비전통적 안보 개념에 입각한 新安보 개념 재정립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新安보 개념은 주체와 수단면에서 전통적 안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자연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되며, 수단도 기존 군사력에 더해 개별적인 무기, 테러행위와 과학기술, 기후변화, 질병 등 다양하다. 비전통적 안보, 즉 기존 新安보의 공통의 위협인식, 협력, 상호신리로 집약되는 개념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대처를 통해 새롭게 재정립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의 新安보 개념과 달리 코로

나19 팬데믹의 국제정세는 탈(脫)세계화(deglobalization)와 폐쇄적 국가주의의 심화, 각자도생(各自圖生), 미·중의 전략경쟁이 가속화되어 新냉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리고 WHO 등 신뢰할 만한 국제적 레짐의 권능이 도전받으며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보건·의료분야를 초월해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新안보 위협에 대한 관리와 대안 발굴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한국은 新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내적 대처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현황과 전망을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형 방역(K-방역)의 소프트 파워를 공유하는 등 의제 창출자로서의 역할 담당해야 한다. 신종 감염병과 더불어 新안보 위협 이슈별 목록과 대응기준을 정립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중의 전략경쟁이 이전보다 더 심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문제도 재검토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이익이 무엇이고, 또 그 국가이익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어떠한지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新안보 개념과 지정학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책발전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닥칠 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국제질서의 변화 전망과 新안보 개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시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2018.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김상배. 2016. “신흥안보와 메타거버넌스.”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1호. 1-20.
- 김윤종. 2020.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전격 선언 배경은?” 『동아일보』 (3월 12일).
- 김호홍. 2020. “바이러스와 신안보 협력.” 『국민일보』 (2월 27일).
- 김호홍·박보라. 2020. “한·중 미세먼지 갈등의 신안보적 함의와 정책 고려사항.” 『INSS 전략보고』 71호. 1-25.
- 류지복. 2020. “트럼프 이어 폼페이오도 코로나19 발원지로 우한연구소 지목.” 『연합뉴스』 (5월 4일).
- 마이클 그린. 2020. “코로나19가 바꾸는 세계 정치 지형.” 『중앙일보』 (3월 13일).
- 박병광. 2014. “국제질서 변환과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국방연구』 제57권 1호, 1-20.
- 박병광. 2020.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 전략보고』 67호, 1-18.
- 박영준. 2020.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국가안보의 과제.” 『RINSA 안보현안 분석』 Vol. 165, 1-4.
- 박재완. 2020. “COVID-19 사태와 국가안보.” 『월간자유』 2020년 4월호, 24-33.
- 아산정책연구원. 2019. 『ASAN 국제정세전망 2020: 신 지정학(Neo Geopolitics)』.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윤석준. 2020. “COVID-19와 지정학의 변화.” 『月刊 KIMA』 2020년 4월호, Vol. 26, 2-9.
- 이수훈. 2020.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인간안보 개념의 변화와 국제기구의 역할.”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4월 28일, 1-7.
- 이영섭. 2020. “코로나19로 ‘증오범죄·인종주의 공격’ 증가.” 『RESEARCH PAPER』 (4월 7일), 1-20.
- 이정은. 2020. “트럼프, 결국 WHO ‘돈줄’ 끊었다…분담금 집행 전격 중단.” 『dongA.com』 (4월 15일).
- 전봉근. 2020.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08, 1-24.
- 전웅. 2004.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 21-40.
- 정일성. 2019. “신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지역통합방위체계 발전방안.” 『

- 지역과 세계』 제43집 3호, 69-91.
- 존 J. 미어세이머 저. 이춘근 역. 2017.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서울: 김앤김북스.
- 차두현. 2020. “코로나19를 통해 본 ‘新安보’와 국제질서.” 『issue BRIEF』 2020-10, 1-19.
- 코나스. 2020. “코로나19를 통해서 본 신안보 위협.” 『코나스』 (2월 19일).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 “COVID-19 팬데믹 도래와 세계의 변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KIMA News Letter)』 제748호, 1-3.
- 한스 모겐소 저, 이호재·엄태암 역. 2014. 『국가 간의 정치 1』, 경기 파주: 김영사.
- 황진환. 2015. 『新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 Bojan Pancevski and Norman Laurence. 2020. “EU Plans to Ban Entry at Its Borders, but Barriers Rise Within Bloc.” *Wall Street Journal* (March 16).
- Buzan, Barry. 1991.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Colorado: Lynne Rinner Publishers.
- Derek S. Reverun and Kathleen A. Mahoney-Norris 2011. “Health Security,” *Human Security in a Borderless World*. Colorado: Westview Press.
- Kurt Campbell and Rush Doshi. 2020. “The Coronavirus Could Reshape Global Order. China is Maneuvering for International Leadership as the United States Falter.” *Foreign Affairs*. Vol. 99, No. 2, 1-24.
- Paris, Roland. 2001.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2, 1-20.
- UNDP.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투고일 : 2020년 7월 14일 . 심사일 : 2020년 7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7월 27일

* 박재완은 조선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월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연구교수, 화생방방재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북핵 검증” “EMP 방호” “SLBM 대응” “군비통제 방안”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이 있다.

*최기웅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육군화생방학교 생물학교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북한의 생물학 위협과 한국의 대비방안” 등이 있다.

<Abstract>

**Prospects for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fter COVID-19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Order**

Park, Jae-wan
(Wonkwang University)
Choi, Ki-woong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t the COVID-19 pandemic will bring, and draw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emerging security. The emerging security theory, which contrasts with traditional security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will need to be redefined to match the post corona era.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post corona era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ill have a deglobalization and deepening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ompetition for system superiority, self-prosperity, risk of flooding of nationalism, and a desi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it was an opportunity to re-recognize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through the response of a new infectious disease called COVID-19 and a new security threat, Korea is faced with new threats and opportunities. Korea should actively and preemptively accept the change of the new international order in preparation for the post corona era an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turn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Keywords :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Order, Emerging Security, Deglobalization